

성과없는 복지예산 정리하자

김 원식 (건국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미트콘서트

2021. 7. 14

목차

- I. 서론: 지속가능 복지 Stress Test
- II. 문재인정부의 복지 현실
- III. 코로나가 만든 복지 현실
- IV. 정책방향
- V. 결론: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복지혁신

- 본 발제문은 “복지제도문제 없나?” 건전재정포럼(2021.6.15)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발제문작성과정에 많은 고견을 주신 건전재정포럼의 최종찬 대표님 외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제의 내용은 발제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I. 서론



복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위기

-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실업으로 양극화 심화
 -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입법 및 실행
- 복지 불만족 심화
 -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부실화
 - 주관적 복지 불만족인구 비율 19.2%: OECD 주요선진국의 2배 수준
- 복지비 부담이 재정불안정(국가부채 증가)으로 전이
 - 국민들의 복지비 부담 한계
 - 문재인정부(2017~2020) 국가채무 186.7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42.2조원), GDP대비 48.4%(2020)
 - 박근혜정부(2013~16) 국가채무 136.9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06.8조원), GDP대비 38.3%(2016)
- 복지관리비(인건비) 상승: 복지비 누수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공무원 증원
 - 문정부 출범 후 공무원 9만2천명 IMF~2017년 8만7천명 증가

복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위기

– 복지시스템의 부실관리

- 사각지대: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 이탈로 소득파악 곤란/ 긴급 대응 미흡
- 중복급여: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포폴리즘 복지 경쟁
- 사중적 제도: 효과없는/역진적 명분적 제도 도입, 기득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최저임금제, 고교의무교육 확대 등)

–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등 신제도 요구 및 양산 중

지속가능 복지 Stress Test

- **복지비 지출이 빈곤률을 줄이고 있는가? No!**
 - 빈곤의 원인은 left-behind 및 고용감소
-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No!**
 - 보편적 복지로 빈곤층 소외
 -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로 신규 산업간 격차 확대
-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Yes!**
 - 국가부채 증가, 성장잠재력 하락, 출산율 전가로 세대간 연대 약화
- **복지비 지출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No!**
 - 하향평준화의 강화로 사교육비 증가
-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No!**
 - 정부의 확장적 복지 및 관련 공공부분 고용증가로 경제적 비효율 상승
 - 복지재정의 조달을 위한 증세는 성장을 억제

II. 문재인 정부의 복지 현실

복지비 추이

-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노동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총예산증가율보다 2.3%p 높고,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도 증가함.

<표> 연도별 복지예산 지출추이

(단위: 조원, %)

	보건·복지·노동		교육		예산총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4	106.4	29.9%	50.7	14.20%	355.8
2015	120.4	31.3%	52.9	13.80%	384.7
2016	126.9	31.8%	55.1	13.80%	398.5
2017	131.9	32.2%	59.4	14.50%	410.1
2018	144.6	33.4%	64.2	14.80%	432.7
2019	163.2	34.3%	70.8	14.80%	475.4
2020	180.5	35.2%	72.6	14.10%	512.3
2021	199.7	35.8%	71.2	12.76%	558.0
연평균 증가율 (‘17~’21)	8.7%		3.8%		6.4%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 2018년은 163조원의 복지예산으로 3.2%의 빈곤율을 낮춤(0.199에서 0.167로). 1%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50조9천억원의 비용이 듭.
- 2017년 131조원의 복지예산으로 빈곤율 2.4%, GINI계수 0.05 낮춤.

<표>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빈곤율)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17	2000	2010	2017
스웨덴	0.27	0.28	(‘18) 0.25	0.05	0.09	(‘18) 0.09
노르웨이	0.24	0.26	(‘18) 0.26	0.06	0.08	(‘18) 0.08
덴마크	0.23	0.24	(‘16) 0.25	0.05	0.06	(‘16) 0.06
스페인	..	0.35	0.35	..	0.15	0.15
이탈리아	0.28	0.32	0.33	0.12	0.13	0.14
그리스	..	0.32	0.33	..	0.14	0.12
영국	0.31	0.32	(‘18) 0.29	0.11	0.10	(‘18) 0.12
미국	0.26	0.28	0.29	0.17	0.17	0.18
한국	..	0.17	0.20	..	0.15	0.17

출처: OECD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재정의 재분배정책 수행 불가능함.
 - 복지개혁이 전제된 재정지출이 필요함.

<표>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17	2000	2010	2017
스웨덴	0.45	0.44	(‘18) 0.43	..	0.34	(‘18) 0.28
노르웨이	0.43	0.42	(‘18) 0.43	..	0.31	(‘18) 0.26
덴마크	0.42	0.43	(‘16) 0.45	0.23	0.25	(‘16) 0.26
스페인	..	0.51	0.51	0.26	0.25	0.33
이탈리아	0.47	0.50	0.52	..	0.34	0.33
그리스	..	0.52	0.53	0.36	0.38	0.32
영국	0.51	0.52	(‘18) 0.51	0.24	0.27	(‘18) 0.37
미국	0.48	0.50	0.51	0.35	0.34	0.39
한국	..	0.34	0.41	0.32	0.32	0.36

출처: OECD

왜 복지지출은 비효율적인가?

- 복지제도(빈곤 선택적 제도)가 대상의 확대에 따라 사회정책화(보편적 제도화)되고 있음.
 - 복지제도의 역분배화(비빈곤층 지원 확대)를 의미함.
- 보편적 복지의 이중성
 - 보편적 지원은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식적 지원임.
 - 비빈곤층에 대한 혜택에 집중함.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득표 유인 낮음.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복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으로 누수가 심각함.
- 정부부처간 역할 중복
 -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 사회정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 통합 과제
 - 각부처가 노인, 여성, 청년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연금정책의 경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임.
- 사증적 복지제도: 효과기대할 수 없는 복지지출
 - 고교 무상교육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비필수의료 보장
 - 비급여제도/ 병실2인의무화, MRI 급여화 등
- 국민인식의 부족
 - 중산층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인식함.
 - 복지지출이 후세대의 부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증세의 환상으로 무상, 포퓰리즘에 긍정적임.

문재인정부의 복지와 재정 1

- 정부예산의 48%(2021년도 기준)를 보건 복지 고용 및 교육 부문에 사용하면서도 국민들의 생활안정/만족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21년도 총지출 555.8조원, 보건·복지·고용 부문 199.9조원, 교육 부문 71조원.
 -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실업으로 양극화 심화가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입법으로 청년, 노인,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업 및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림.
 - 복지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음.
 - 양적 확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가비교에 있어서 '주관적 복지 불만족인구 비율'은 19.2%로 OECD 주요선진국의 2배 수준임: 미국 9.30%, 영국 6.005, 독일 9.3%, 프랑스 8.70% 등(OECD, Better Life Initiative 2020)
 -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제도의 혁신(innovation)으로만 개선 가능함.
 - 공급자간의 경쟁과 보완

문재인정부의 복지와 재정 2

- 복지비 부담이 재정불안정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전이되고 있음: 2021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9조4천억원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38조2천억원이 적자가 됨. 즉, 복지부문이 재정적자의 51.1%의 기여를 함.
 - 문재인정부(2017~2020) 국가채무 186.7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42.2조원), GDP대비 48.4%(2020)
 - 박근혜정부(2013~16) 국가채무 136.9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06.8조원), GDP대비 38.3%(2016)
- 국민들의 복지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국민부담율은 2020년 27.7%임. 2017년 24.8%이후 7년 연속 상승 중임.
 - 사회보험의 적자 및 기초연금 및 무상복지의 확대는 향후 국민부담율을 더 끌어올릴 것임.
- 복지비의 증가와 함께 확대된 복지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증원이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예산에서 일반행정부의 비중(6.4%, 2021)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공무원은 9만2천명이 증가했고, 이는 IMF~2017년 8만7천명 증가 인원보다 많음.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1

-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비효율이 심각함: **사각지대와 중복급여**
- **사각지대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의 이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이 부실함.
 - 사회보험의 가입률에서 비정규근로자들은 국민연금 61.7%,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74.4%에 불과함 (2020년도 기준). 반면 정규근로자들은 95%이상 가입 중임.
 -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보고됨(복지부, '2019년도 성과계획서').
 - 빈곤층 907만명 가운데 복지수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명임.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35만명을 발굴하여 13만명만 지원함(사회보장정보원, 김승희 의원실, 2019.3).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2

-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포퓰리즘 복지 경쟁으로 중복급여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은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복 현금 지원 대표 사례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까지 월 최대 45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고령자채용 시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지원
노인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체	각종 노인수당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공로수당’ ‘노인수당’ 등 지급
청년 자산 형성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에게 2~3년 동안 일정 금액 지원
	전라남도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청년과 지자체가 매달 10만원씩 36개월간 공동 적립
	경기 양평군	청년 통장	청년과 지자체가 월 14만원씩 36개월간 공동 적립
청년 구직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목적으로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취업 지원 목적으로 청년 10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취업 지원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충청남도	아기수당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
	강원도	양육기본수당	48개월 이하 아기에게 4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

출처: 한국경제신문, “[단독] 내년 현금복지 ‘중복살포’ 만 23조“, 2019.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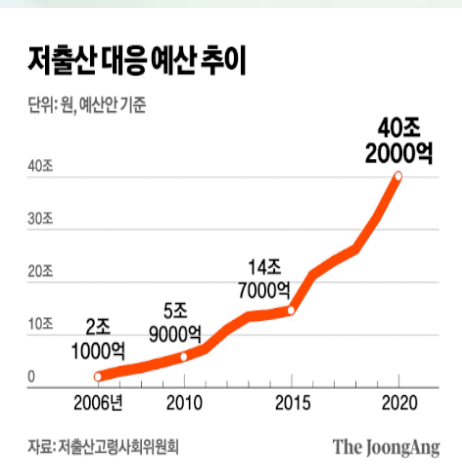
○ 전체 복지사업 대비 중복사업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기준, '17.8월)

구분	전체 사업			중복 사업		
	계	행복e음	범정부	계	행복e음 (사전차단)	범정부 (사후통보)
사업 수	347개	77개	270개	85개 (중복유형: 163종)	60개 (중복유형: 101종)	25개 (중복유형: 62종)
사업운영 예산 (추정치)	75.1조	42.8조	32.2조	36.2조	30.8조(85%)	5.4조(15%)

출처: 중앙일보, “[단독] 지난해 복지재정 최대 142억 중복지급...” 부처간 정보 교류 개선해야 “, 2017.10.16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3

- **거품/물타기 제도가 많음.**
 - 정책목표에 벗어난 제도의 끼워넣기가 성행함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16개 정부부처의 119개가 저출산예산대책
 - 저출산예산에 관공호텔지원 126억원, 만화율성 40억원 등 (2021년도)



‘황당’ 저출산 예산 사업

※ 2021년 예산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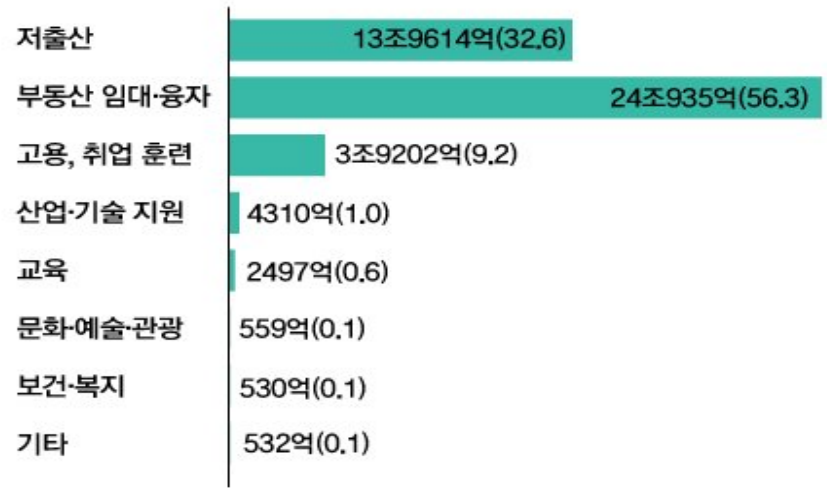
자료: 조명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The JoongAng

저출산 예산 실상은

※ 2021년 예산

단위: 원, ()는 저출산 총예산 대비 %



자료: 조명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The JoongAng

출처: 중앙일보, “관광호텔 지원 126억, 만화육성 40억 ... 이게 다 저출산예산?”, 2021.6.22.

성과없는 복지예산 정리하자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4

•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가 심각함.

– 국민연금

- 국민연금 4차재정재계산(2018)에서 2041년 수지균형이되고 기금고갈이 2057년으로 3차재계산보다 3년 단축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재계산위원회가 제출한 4지선다형 대안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

– 건강보험

-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0.6%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43.1%임. 2018년 40.8%, 2019년 41.4%였음. 노인인구 비율은 15.7%로 평균보다 약 2.9배 더 사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는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로 0.74%p인상됨. 요율인상율은 매년 2~3% 수준임.
- 건강보험에서 원격의료, DRG(포괄수가제)의 확대, 진료체계 개혁 등 진료비 절감 노력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은 OECD최고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음.
 - 산재사망율(만명당): 2020년 1.09, 2019년 1.08, 2016년 0.96(최저수준)

– 고용보험

- 코로나이전부터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3천억원에서 **2021년 현재 2조7천억원의 적자로 추정됨.**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5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비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 신제도의 도입 및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거꾸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코로나의 수혜자인 ICT 및 비대면 기업들은 성과급 잔치와 이에 따른 배분 등의 갈등을 낳고 있는 반면 피해기업들로서 대면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는 습관적 실업과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보편적 복지가 역진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기본소득 논쟁은 기존의 소득재분배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음.
 - 5030의 7번째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은 과거와 달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음에도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낙오층(Left-behind)임.
 - 특히 평준화 공교육은 이들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부모찬스를 키우면서 양극화를 확대함.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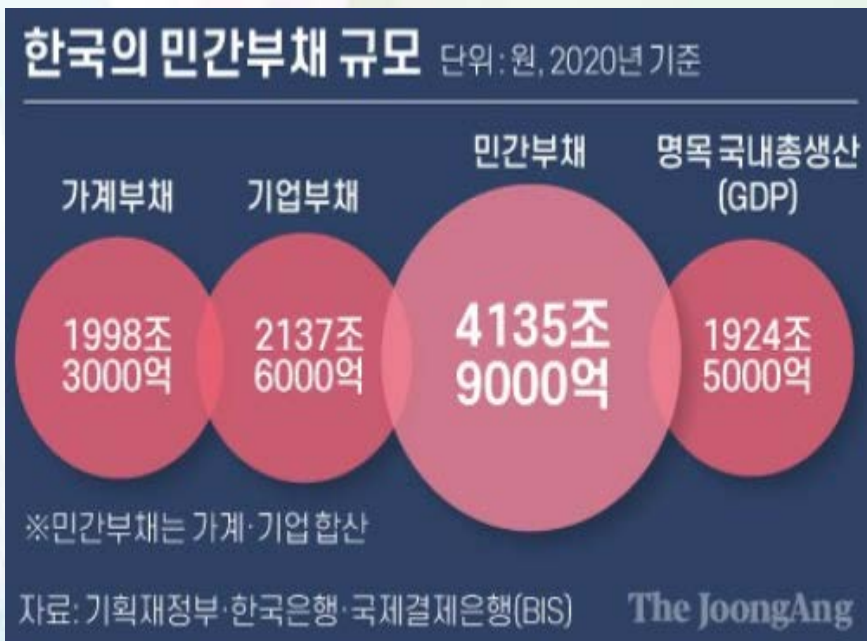
- 사회적으로 다양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최근의 복지 논점들은 다음과 같음.
 - 기업
 - 대기업 vs 영세 중소기업/자영업
 - 대면기업 vs 비대면기업
 - ICT기업 vs 전통기업
 - ➔ 영업손실 보상해야 하나?
 - 개인
 - 고소득층 vs 저소득층(취약계층)
 - 대기업 정규직 vs 중소기업 비정규직
 - 중고령층 vs 청년층
 - 자산계층 vs 근로계층
 - 자가보유자 vs 무주택자
 - 자산양극화
 - 순자산5분위비율: 166.64배(2020), 125.60배(2019)
 - 부동산/자산 비율: 77.1%(5분위), 29.6%(1분위)
 - ➔ 기본소득 필요한가?

국민부담의 한계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국민부담을 증가율을 보임.
 - 27.3%(2019), 24.7%(2016), 23.1%(2013)
- 사회보험의 적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매우 큼.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보험료를 9%에서 15~30%까지 인상해야 함.
 -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수급권이 급속히 늘어나므로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음.
 -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요구 및 고령화로 건강보험료(6.67%)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6.67%의 10.25) 7%대에서 10% 이상까지 인상해야 함.
 -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및 향후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2%대에서 3%대로 (실업급여보험료율 1.6%)인상해야 함.
 - 고용보험 적립금: 2017년 10조3천억원, 2021년 -2조7천억원(추정)
- 근로자 부담의 한계
 - 저출산 심화됨: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0.84명, 2020)
 - 성장잠재력 및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임금상승률 저하

국민부담의 한계

- 개인부채의 증가(1,998조원, 2020)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 증가할 가능성 높음 (2021년 기준금리 0.50%). 0.25%인상시 금리부담은 50%상승하는 결과 낡음.



출처: 중앙일보, “한 가계 빚 증가속도 1위... 기업 가계부채 4000조 돌파”, 2021.4.14



사회안전망의 위기

-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보험의 가입율은 상승하지 않을 수 있음.

<표>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2020)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연금
전체근로자(특수형태제외)	90.3	91.1	91.3	97.8	50.2
정규근로자	94.4	98.5	98.3	97.9	58.9
비정규근로자(특수형태제외)	74.4	64.9	61.7	97.5	23.8
재택/가내근로자	76.2	78.7	80.2	100	30.2
파견/용역근로자	96.2	96.1	94.9	99.7	43.4
일일근로자	55.8	20.2	20.5	97.7	2.1
단시간근로자	81.1	79.0	77.6	95.7	20.3
기간제근로자	86.2	93.1	86.6	99	44.9
한시적근로자	43.9	41.4	39.5	85.4	7.6

• 출처: 고용노동통계, 통계DB

빈곤층의 복지 소외

- 2021년 1/4분기 공적이전의 크기가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가장 낮음. 전년 대비 증가율도 2, 3, 4 분위보다 낮음. 정부지출의 역진성이 심각함.
- 소득이 적은 1분위의 근로환경이 크게 악화됨을 보임.(근로소득 감소율 -3.2%)

<표> 코로나 소비 동향: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2021 1/4)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가구원수(명)	1.47		1.88		2.4		2.78		3.31	
가구주연령(세)	63.2		52.9		49.9		49.1		49.2	
소 득	910	9.9	2,301	5.6	3,618	2.9	5,370	1.2	9,714	-2.8
경상소득	902	9.9	2,286	5.7	3,597	3.3	5,318	1.8	9,393	-1.8
근로소득	171	-3.2	1,150	-1.5	2,239	6.5	3,484	-0.7	6,842	-3.9
사업소득	87	-1.5	401	2.6	694	-11.8	1,042	-3.7	1,611	4
재산소득	13	21.7	20	7.2	23	-24.7	33	25.7	75	-28.8
이전소득	631	15.8	716	22	642	13.5	759	24.2	866	9.3
공적이전	436	23.1	508	37.0	458	29.5	540	48.2	542	8.5
사적이전	195	2.2	209	-3.6	184	-13.1	219	-11.2	324	10.5
비경상소득	8	5.2	15	-11.5	21	-33.8	52	-36.9	321	-24.7
가계지출	1,306	8.9	2,007	2.9	2,854	2.8	3,870	-1.6	6,417	-0.6
소비지출	1,125	9.8	1,623	2.3	2,217	5.7	2,845	-1	4,282	-0.7
비소비지출	182	3.4	385	5.6	637	-6.2	1,025	-3.1	2,135	-0.4
처분가능소득	728	11.6	1,917	5.6	2,981	5.1	4,345	2.2	7,580	-3.4
흑자액	-397	-6.7	294	28.4	763	3.5	1,500	8.9	3,297	-6.7
흑 자 율(%)	-54.5	2.5p	15.3	2.7p	25.6	-0.4p	34.5	2.1p	43.5	-1.5p
평균소비성향(%)	154.5	-2.5p	84.7	-2.7p	74.4	0.4p	65.5	-2.1p	56.5	1.5p

출처: 가계동향조사

2차추경의 문제들: 내용

-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소상공인 피해보상(소상공인지원법, 20216.28) 0.6조원
 - 7월 이후의 집합금지 영급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소상공인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원(저소득층 소비자금 0.3조원)**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1인당 25만원**
 -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조원
 - 백신 방역 보강 4.4조원
- **고용 및 민생지원 2.6조원**
 - 고용조기 회복지원, 청년희망사다리 피키지, 문화예술 관광업제 협력 제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상권 농어기 지원 0.4조원
 - 지방재정 보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감) 12.2조원
- **취약계층 주거 생계부담 등 완화 3.0조원**
 - 청년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취약계층 돌봄 생계 금융부담 완화)

III. 코로나가 만든 복지 현실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코로나는 국민들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함.**
 - 스스로의 건강 관리 및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
 - 방역과 백신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 수용도가 높아짐.
 - 병의원에 대한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시범적 원격의료 기법들에 대한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 77%”, 2015.5. 21
 -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만족도 87% (2021.2.23~3.8)
 - 일본은 2015년도 도입함.
 - 로봇 등 의료 신기술의 활용이 늘어남.
-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의 활용도가 단순 주거에서 육아 및 업무로 확장됨.**
 - 재택근무를 위한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변화욕구가 발생함.
 -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거서비스 비용이 급등함.
 - 보유세 인상은 가정의 생활비를 인상시킴으로써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
 -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관련 건강보험료 등 준세금의 증가로 이어짐.
 - 보유세의 인상은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전가로 이어지서 전월세가 상승하거나 품귀됨.
 - 주거서비스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공공주택의 공급요구가 복지차원에서 제기됨.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경제사회적 불안이 무상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정부의존도를 높임.**
 - 재난지원금
 - 현금성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
 - 손실보상
 -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제적 lockdown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함.
 - 기본소득
 - 대량실업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 경제활성화 보다는 기본소득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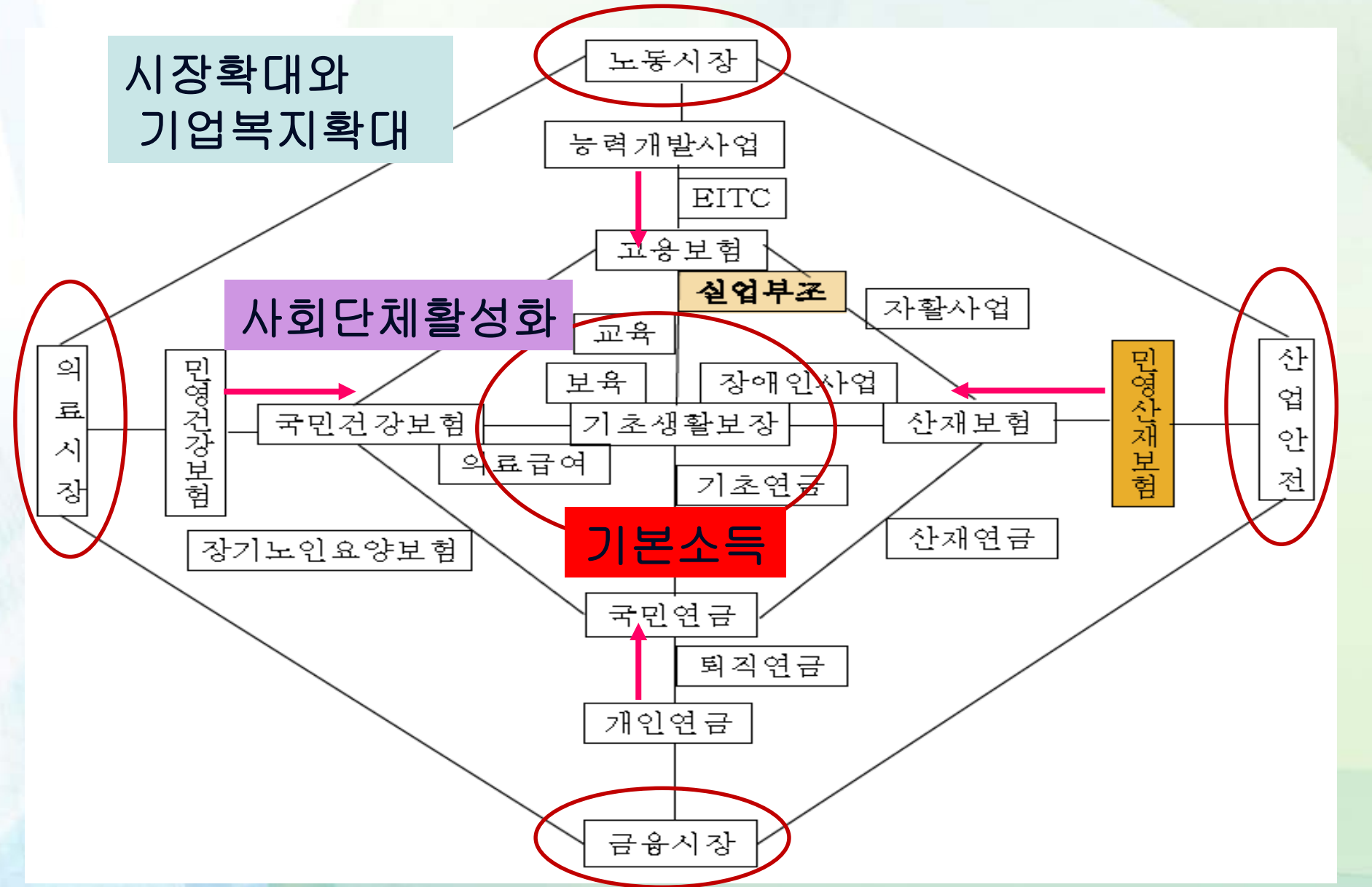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 노동시장이 전통/내수산업의 근로자와 ICT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수출중심산업 근로자로 양극화 개편되고 있음.
 - 내수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함.
 - 비대면 및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정규직을 기피하게 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임.
 - 재택근무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work and life balance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음.
On-off line 병행
 - 일과 가정의 양립
- 교육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이 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간 학력 저하가 심각함.
 - 사교육 수요가 증가함.
 - On line 수업이 늘고, On-Off line 수업의 병행을 선호함.
 -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학, 코딩 등 교육 내용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함.
- 정부의존도가 높아지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 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정치권의 늦장 대응은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를 낮춤.
 - 방역 중심의 코로나사태는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보임.
 - 복지부분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공공 중심의 복지를 강화함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IV. 정책방향: 시스템 개혁

- 현재의 복지제도 및 복지재정은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없이 지속가능하지 않음.

복지네트워크 모델(2021)



왜 복지지출은 비효율적인가?

- 복지제도(빈곤 선택적 제도)가 대상의 확대에 따라 사회정책화(보편적 제도화)되고 있음.
 - 복지제도의 역분배화(비빈곤층 지원 확대)를 의미함.
- 보편적 복지의 이중성
 - 보편적 지원은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식적 지원임.
 - 비빈곤층에 대한 혜택에 집중함.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득표 유인 낮음.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복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으로 누수가 심각함.
- 정부부처간 역할 중복
 -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 사회정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 통합 과제
 - 각부처가 노인, 여성, 청년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연금정책의 경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임.
- 사증적 복지제도: 효과기대할 수 없는 복지지출
 - 고교 무상교육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비필수의료 보장
 - 비급여제도/ 병실2인의무화, MRI 급여화 등
- 국민인식의 부족
 - 중산층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인식함.
 - 복지지출이 후세대의 부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증세의 환상으로 무상, 포퓰리즘에 긍정적임.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금급여 중심에서 질적 서비스중심의 전환
 - 기본소득제를 기본서비스제로 전환
 - 기본서비스의 공급은 public-private mix with Voucher
- 빈곤가구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위치추적, CCTV, 빅데이터, AI 등 ICT기술 적극 도입
- 'Play or Pay' 도입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환수함.
 - 현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
 - 자치단체의 정책목표는 주민복지임.
- 자치단체별 상대적 빈곤인구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 자치단체 교부금제도 적용.

중복복지 조정

- 각부처의 복지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야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
 - 청년, 여성, 노인, 빈곤층 부문 등
- 부처간 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유사 업무 분야를 조정하고 집중화함.
 - 유사 복지정책 정리
 - 인적 조정
- 중앙정부의 개인별 투명한 공적이전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함.
 - 여러제도로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적지원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함.

사회보험시스템의 조정

- 사회보험료 징수시스템의 국세청 이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서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함.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의 진료체계 통합
 -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작업장외에서의 사고 구분이 어려움.
 -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능을 통합한 노인건강보험의 도입
 - 노인장기요양은 진료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사회보험청의 신설
 - 각 사회보험시스템의 혁신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광역 자치단체별 재정 분리 및 사회보험 차별적 적용
 - 다양한 특성의 5천만 인구를 하나의 제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민영 사회보험 활성화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을 분산관리(Risk Pooling)함.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일자리 간의 다층 구조화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
 - 민영산재보험 활성화
 -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V. 결론: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복지혁신

결론: 정리 1

- **빈곤박멸(Poverty Eradication) 명확한 복지정책의 목표 설정함.**
 - 복지정책 vs 사회(발전)정책
 -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
 - 사회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
 - ➔ 전국민 사회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세금낭비임.
- **Intra-generational pay-as-you-go(세대내 부과방식) 예산시스템**
 - 복지비부담의 세대간 이전을 억제함.
 - 국민연금 개혁 촉진해야 함.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비의 고령세대 부담 강화함.
 - 조세부담 공공부문의 자본집약적 개혁으로 복지비 지출 억제함.
-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혁**
 - 부가가치세율의 인상과 (의무적)복지지출과의 연동함.
 - 기초연금, 건강보험의 정부부담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등.
- **복지지출은 현금 중심에서 (질적)서비스/voucher 중심으로 전환함.**
 -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민영화를 추진함.
 - 복지서비스의 시장경쟁 제고: 질적 개선 가능함.

결론: 정리 2

-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컨트롤 타워를 수립함.**
 -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부처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 혁신이 필요함.
 - 공공 중심의 복지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함.
- **혁신적이고 개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함.**
 - 로봇, AI, 원격관리 등 노동집약적 복지부분에 자본적 투자를 유도함.
 -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인허가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 민간,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
- **가족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의 가족중심에서 개인별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함.**
 - 개인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총량(각종 급여총액 상한제)을 제한함.
 - 예를 들면, 기존제도에서 연금제도는 개인별제도로 전환함.
 - 공공 선택적복지제도: 기업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는 카페테리어플랜(선택적복지)을 복지정책으로 채택함.

결론: 정리 3

- 소득역진적 사회복지정책을 형평성 중심으로 조정함.
 -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 국민연금 소득공제 폐지
 -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폐지
- 광역자치단체별로 복지제도의 유연화
 -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역별로 분리 운용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별 차등화 허용함.
 -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자율 차등화함
- 정부서비스 공급메카니즘의 다양화
 - 민간, 공공, 사회단체간 경쟁 및 역할 배분함.
 - 민간역할을 극대화함.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중적 복지지출의 확대 억제
 - 고교 의무교육 확대적용
 - 근로자의 학자금은 기업에서 부담하다가 정부가 부담하게 됨.
 - 자립형 사립고교 폐지
 -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로 학비가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됨.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하락함.



감사합니다!

성과없는 복지에산 정리하자